



한리일보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21일 제주시 외도동 보리밭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사이길을 걸으며 제주의 초여름 풍경을 한껏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보전지역 관리 조례’ 격론 끝 도의회 상임위 통과

환경도시위 가부결정 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

제2공항 예정지를 비롯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격론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의견이 모이지 못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각 1등급 지역 안에 공항·항만을 설치하려면 도의회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도정이 기본계획 수립 중간점검 결과와 사전타당성 영역, 예비사전타당성 영역, 자문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 한 번 거르는 장치를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도정은 소음 피해 등에 대해 성산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사는 규정에도 없는 대체부지를 주겠다고 한다. 계획이 적정하지 검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은 “일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반대 의견을 밝혀 오히려 도민갈등을 부추기고, 제주도 환경보전국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기간에도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며 “제주 자연환경과 경관을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만·공항에 대해 다시 한번 도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자는 데 반대하면 환경보전국은 뭐하러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금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보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 문제에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조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방식 개선 안되나

경기도, 하반기 ‘노선입찰제’ 도입·시범 운영 노선 공공 소유-버스업체에 운영권 위임 방식 제주도, 기존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만 고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고집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같은 방식을 탈피한 ‘노선입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는 대신에 버스회사의 표준원가에 따라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제주도 전체 예산 4조7841억원 가운데 965억원을 버스준공영제에 투입했다. 이같은 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서

울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액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원, 업체의 효율성 개선 노력 부족 및 업체의 효율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표준운송원가 세부 운영 장치의 부족 등으로 2009년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특히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서비스 질 저하와 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 도입된 제주와 같은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탈피하고 공공이 노선을 갖고 버스업체에 한정면허로 운영권을 위탁하는 형태의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운영업체를 4년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부실업체를 탈락시켜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말부터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선입찰제는 버스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업체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한정면허)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으로 “적자노선을 포함해 노선별로 원가를 산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남경필 전지사 시절 도입된 제주와 같은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원희룡 지사는 21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수의 노선과 비수의 노선으로 나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이용자 수요와 만족에 초점을 맞춰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는 “비수의 노선은 기업 속성상 배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한 후 “앞으로는 수요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수요맞춤형’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유지의사를 표명했다. 고대모기자

11월 8~12일 2019 제주감귤박람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지난 8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양병식) 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2019 제

주감귤박람회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2019 제주감귤박람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을 맡아 오는 11월 8~12일 사이 닷새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 축하공연, 폐막식 등 공식행사와 함께 ▷국내·

외 감귤, 농·특산물, 농기자재 등 전시행사 ▷감귤 유통·가공·품질 컨퍼런스, 바이어상담회 등 학술행사 ▷우수감귤품평회, 감귤요리경연, 감귤가요제 등 경연행사 ▷감귤토크콘서트, 금물과원퍼포먼스, 감귤 따기체험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관람객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개막식부터 사용간 오후 8시까지 야간 개장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감귤품평회 수상자 직거래장터 운영 ▷지역 주민참여 확대 및 공모를 통한 체험·감귤가공·문화경연대회 ▷제주 신혼여행 감귤 사진공모전 ▷감귤 푸드존 운영 ▷감귤원 돌담길 ‘굴림추책’ 걷기 등이 추가 운영된다.

사전행사로오는 이달중 감귤꽃길 걷기와 8월 풋갈 홍보 등이 준비되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알림

뉴스를 활용한 인성교육

“학교를 찾아가입니다”

- ▶사업 명: 2019 뉴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인성교육
- ▶사업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7곳
- ▶사업 형태: 특강·NIE 체험 (1곳당 2학년(또는 동아리), 각 연속 2시간)
- ▶사업 기간: 2019년 5월 27일~12월 13일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5월 24일(금)까지 선착순
- ▶신청처: 한리일보 홈페이지(<http://www.ihalla.com>)
직접 배너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ejoh@ihalla.com)로 전송
- ▶문의: 010-2024-5692(NIE 담당 기자)

DSC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제주사랑,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함께 합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토목공사부터 주택사업, 해양인프라 건설까지
자연과 사람, 사람과 기술을 담아 제주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